

수은중독 1년 고통 여전한데...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산재 보상 제대로 못받고 남영전구는 치료비 지금 미뤄 더디기만 한 수은 제거작업에 하도급 불법도 확인 못해 민노총, 공정한 보상·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지난해 3월 남영전구 광주공장 철거작업 노동자 집단 수은중독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산재해(산재) 승인을 받은 피해자들조차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고, 남영전구도 약속한 치료비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수은 제거 작업은 더디기만 한 상황이고, 철거작업 당시 5단계에 걸쳐 하도급이 진행됐지만 광주고용노동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은중독 사고 1년...피해자 고통 여

전=지난해 3월23일부터 4월7일까지 남영전구 광주공장 생산설비 철거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수십여명이 집단으로 급성 수은중독에 걸렸다. 당시 현장에 수은으로 추정되는 은색 물질이 가득했지만 노동자들은 남영전구 측으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사태가 커지자 광주고용노동청은 당시 근로자 47명에게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고,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의 권유로 150여명도 추가로 건강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임시건강진단을 받은 47명 중 증상이 있음에도 '수은중독'으로 판정을 받

은 사람은 14명에 불과했다. 또 14명 중 2명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다. 사업자로 분류돼 산재 승인 요건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산재 인정을 받은 12명도 제대로 된 휴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거 작업 이후 산재 승인까지 4~7개월의 시간이 있지만 이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게 피해자들의 말이다. 이 기간에 대해 보름 동안의 휴업급여만 받은 피해자도 있는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 승인 이후의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고 있다"며 "다만 산재 관련 법상 승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노동능력 상실과 미취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각각 780여만원과 430여만원의 치료비를 남영전구 측에 청구했지만 2월에 청구한 2차 치료비는 한 달째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기관 대응 아쉬움=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적용해 남영전구와 하도급업체 5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남영전구의 발주 이후 5개 업체에 걸쳐 하도급이 이뤄졌지만 이에 대해서는 불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도급이 진행돼 '하도급거래 공평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남영전구 사고 이후 노동부 차원에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 지침

과 소규모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수은농도 조사와 제거 작업을 맡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대응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1월 남영전구 주변 대기 중 수은농도가 전국 월평균 농도의 2배가 넘는 사실을 알릴 때도 최근까지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또 수은 등 오염물질 제거 작업이 언제 끝날지조차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민노총은 이날 '남영전구 수은중독 1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성명을 내고 "사고 당시 감독·처벌·대책을 운운하던 정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던 기업 모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규탄하며, 산재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대학 신입생 투신 부상 경찰 가혹행위 여부 수사

전남의 한 대학교에서 신입생이 대면식 후 건물 4층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가혹행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29일 공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27분께 곡성군 옥곡면 모 대학교 도서관 건물 4층에서 신입생 A(여·21)씨가 투신했다.

A씨는 화단으로 떨어져 목숨은 구했지만, 발목 골절과 후두부 출혈 등으로 중자의 한 대학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이씨가 투신 전 학과 대면식에서 선배들에게 욕설 등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가족들의 주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숨진 지 한달 된 시신 발견

29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임동 한 경로당 2층 주택에서 A(4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구대 경찰관들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하러 경로당을 방문했다가 "A씨가 월세도 밀린 채 한 달째 연락이 두절됐다"는 이웃의 말을 듣고 주택 내부를 수색,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6개월 전부터 이 주택에 세들어 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북부경찰은 시신의 상태로 미뤄 A씨가 숨진 지 한 달가량 지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인권사무소 공개... 지난해 인권침해 사례 보니

폐암 말기 수감자 CT 촬영 거부한 교도소 서류 허위 작성해 강제입원 시킨 정신병원

수감 중인 폐암 말기 환자의 CT 촬영을 거부한 교도소, 전화 안 받은 부하직원에게 육상한 공무원, 서류 허위 작성해 환자 강제 입원시킨 정신병원... 모두 지난해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지난해 총 771건의 진정사건을 접수해 이 중 16건에 대해 권고조치하고, 41건은 합의 종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머지 678건은 각하 또는 기각 처리했다.

광주인권사무소가 이날 공개한 인권침해 사례 중에는 폐암 말기 수감자의 검진 요구를 무시한 교도소 등이 포함돼 있었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광주인권사무소에 폐암 4기 시한부 선고를 받고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동생이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 출소 후 사망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동생이 폐질환

CT촬영을 요구했는데 교도소 측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료진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의 폐암 재발 및 증상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진정했다.

조사결과 광주인권사무소는 교도소장 등이 수감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소홀히 해 A씨 동생이 상태가 악화한 시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어머니의 동의로 2012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3년 가까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중인 B씨는 장기입원이 부당하며 광주인권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해당 정신병원이 B씨 어머니가 6개월마다 심사를 위해 작성하게 돼 있는 동의서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지자체에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과 해

당 정신병원에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C씨는 한 지자체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직원들이 지켜보는 사무실에서 상사로부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들었다고 진정했다. 피진정인은 긴박한 상황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인권사무소는 사무실에서 욕설을 했다는 점 등을 감안, 인격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했다.

이용근 광주인권사무소장은 "예전에는 교도소 등 수용시설 민원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정신병원에서 보호의무자 자격 확인 없이 강제입원 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실전같은 소방전술 경연대회 29일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소방학교에서 열린 '2016 소방전술 경연대회'에서 참가 소방팀이 사다리를 이용해 가상상황의 화재건물에 진입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지역 5개 소방서에서 33개팀 165명이 참가했으며, 우승 팀은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소방전술경연대회에 광주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인터넷 중고사이트 사기 1500만원 가로채

광주북부경찰, 30대 구속

광주북부경찰은 29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송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골프채, 용접기, 전동공구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던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이모(53)씨 등 73명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사겠다'는 글을 올리면 인터넷에서 해당 제품 사진을 찾아 올리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물품 사기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송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번호를 수차례 바꾸고 타인의 중고거래 사이트 아이디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3000원 들고 양주 마신 뒤 '배제'

○...광주 첨단지역 바(Bar)를 돌며 고가의 양주를 마신 뒤 도망치려나 술값을 내지 않고 버티는 짓을 일삼던 40대 남성이 쇠교량 신세.

○...2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배모(47)씨는 지난 22일 밤 10시에 광산구 월계동 한 술집에서 1000원짜리 달랑 석 장을 들고 벨런타인 21년산 1병과 원저 2병 등 양주 3병과 안주 등 53만원여치를 먹고 마신 뒤 돈이 없이라며 술값 계산않을 하자 술집은 그를 추산했는데, 경찰까지 오는 "말짱찌자려립고 값비싼 술을 시키면 전곡 어느 술집이건 돈이 있는지 묻지도 않고 술과 안주를 내주고 서비스도 그만인어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고 진술.

○...사건과 46명으로 무전취식 전과만 42범인 배씨는 지난해 11월 출소 이후 첨단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술집 6곳을 돌며 무전 취식을 일삼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까지 오는 "말짱찌자려립고 값비싼 술을 시키면 전곡 어느 술집이건 돈이 있는지 묻지도 않고 술과 안주를 내주고 서비스도 그만인어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고 진술. /김형호기자 kh@kwangju.co.kr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 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5타경 17980	1	담양군 대덕면 임석리 23 2122㎡	전	38,196,000 38,196,000	농지취득자격증명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5타경 1053	1	영광군 영광읍 동호리 63 2314㎡	대	790,533,78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수목포함, 임차인[김경민]대항력있는임차인으로배당에서보증금전액을배당받지못하면그잔액을매수인이전액, 목록12현황주택및장고로사용중, 목록11, 14건은타인토지매각결쳐있음
		동소 63-3 307㎡	대	790,533,780	
		동소 64-5 1646㎡	대		
		동소 63-4 367㎡	대		
		동소 65-4 23㎡ [현황대]	전		
		동소 65-5 40㎡	대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112 1호 16.5㎡ [말실]	작업장		
		동소 112 2호 38.86㎡ 제시외창고등 3.3㎡	주택		
		동소 112 13, 25㎡ [말실]	주택		
		영광군 영광읍 동호리 64-5 1호 1층56.19㎡	창포, 주택		
2015타경 20504	1	사용면적:전주시 덕진구 중앙대로 13-8 [무야동2가] 등록번호:전북06사5267 기종:암트랙 연식:2008	자동차	38,000,000 38,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월전로65
2015타경 21095	1	사용면적:보령시 수형로목골길 43-2 [명천성] 등록번호:30조8349 차량:SMS LPLI 연식:2010	자동차	10,500,000 10,5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상봉로156번대주차장
2015타경 22777	1	0 [무산통] 등록번호:34고6093 차량:스포티지 연식:2005	자동차	3,000,000 3,000,000	보관장소:광산구상봉로156-2번대주차장
[기타]					
2015타경 2377	1	정성군 삼서면 대곡리 559-2 1537㎡	대	4,886,266,64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수목포함, 목록1동굴판트1층소재, 목록7면타이니2층소재, 목록22간물에서제하는LPG저장시설은타인소유로매각제외, 목록2부속건물명원 [34.08㎡] 현황상위 [경비실]
		정성군 삼서면 대곡리 559-5 1층1613.22㎡ 2층1498.06㎡ 3층687.18㎡ 부속건물 병행 34.08㎡ 제시외 창고 등 206㎡	기타	4,886,266,640	
		동소 559-2 639㎡	대		
		동소 559-5 9㎡	대		
		동소 564-1 495㎡	대		
		동소 565-5 8325㎡	대		
		동소 565-9 9㎡	대		
		동소 565-10 2㎡	대		
		광산군 인천동 735-19 2970㎡	공장용지	5,767,636,400	
		동소 735-19 1층4,153.9㎡ 2층1,545.9㎡ [2층100㎡ 말실] 제시외 창고 등 218.4㎡, 기계기구목록창고 [제시외 건물포함] [공정지당 법제6조제2013-670호기호16[Robot88el 1]내 도장용벨트소재명]	공장용지	5,767,636,400	
● 공권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례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해야 하는 최고거래수고인인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하면 매각이 불가 할 때에는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한 현상부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무원이 민사집행법 제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청을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매각이 취소되는 경우 그 공무원이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신청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청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무원 우선 매수신청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6. 4. 14. [목] 10:00					
3. 매각결정일자 : 2016. 4. 21. [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방법 집행부					
5. 매각방법					
① 입찰방식에 따라야 하며 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신용평가, 보증금명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수신청의 유효기간은 최고거래가의 1일 [타이더]에 해당하여 금요일과 주말의 자기앞유류 또는 현금 공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취득계약을 체결한 [일일 보증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계약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관방이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거래수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거래수고인이고 자신취득수고인인 다른 매수신청인의 매수신청금액은 입찰참가 보증금에 충당되는 즉시 반환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일에도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간에 해당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최종 매각허가결정이 확정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을 실시합니다. 다만, 매각허가일로부터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정허가, 보증금 납부하면 대금납부자가 유효하며, 미지급 매각대금은 실시하여 아니합니다.					
7. 소유권 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리권, 기입장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리권이나 기입장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리권등기료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증확인서 및 등기세영수증 확인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제외공통법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축적하여 실시한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주자, 소유자 또는 대항적권은 부동산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 사항					
① 매각의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매수신청자의 지당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매수인의 주된 목적은 주택이나 상가건물인지를 명시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세입자등이 있음을 명시하는 등 그 임차인이나 기입장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리권등기료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증확인서 및 등기세영수증 확인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제외공통법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축적하여 실시한다.					
② 일반민들의 알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일자 1주일 전부터 매각일전 날까지, 현상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알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설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방식에 나오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 이신분포도 등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여 하는 사람은 입찰보증금 확보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등기 등지리권등기등이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최고거래수고인으로 정한 후 매각결정일이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토지취득자격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에 상당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권 부동산에 매각될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변에 공과하는 물건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변공과를 하지 않으므로 무리하면 계산된 공고나 방면에 치우쳐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⑨ 입찰금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알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센터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알람 가능한 정보는 법원상 제공하도록 할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알람 가능한 정보는 법원상 제공하도록 할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알람 가능한 정보는 법원상 제공하도록 할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알람 가능한 정보는 법원상 제공하도록 할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알람 가능한 정보는 법원상 제공하도록 할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16. 3. 30.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전계수					